

# OECD 공공거버넌스 동향

## - 제38회 공공행정위원회 결과(2008.10.) -

### □ 배경

- OECD 공공행정위원회에서는 2년 단위로 중점업무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'05년, 로테르담 OECD 장관 회의 시, 성과평가,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형성, 위기관리 및 지방분권 등을 지난 '07-08년 업무프로그램으로 선정
- '08년 제 38회 회의 시, 지난 업무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완성도를 고려하여 이를 기반으로 '09~ '10년 업무프로그램을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

### □ OECD 주요현안 및 목표

- 공공행정에서의 국민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에서는 차기 2년간 업무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를 “국민의 정부 신뢰도 (trust in government) 강화” 로 설립
- 각 회원국의 주요 이슈
  - 투자에 상응하는 가치창출(Value

for Money), 신뢰성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성과향상

- 공공서비스 질적 개선, 규제완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
-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서비스 설계, 실행 및 전달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증진, 국민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개발 등
- OECD에서는 국민의 정부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념적 틀 (conceptual framework)을 형성
- 국민의 정부 신뢰도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다음의 세 개의 주제로 구분

- ▶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 
(Innovation in public service delivery)
- ▶ 굿거버넌스(Good Governance)를 위한 개혁 설계 및 이행  
(Designing and implementing good governance reforms)
- ▶ 정부성과 평가  
(Assessing government performance)

- 아울러 OECD는 향후 다음의 공공거버넌스 분야에서 정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(levers)을 지속적으로 연구·조사할 예정

- ▷ 예산 및 정부지출
- ▷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
- ▷ 전자정부
- ▷ 규제개혁
- ▷ 반부패 및 청렴
- ▷ 국민 참여
- ▷ 정부 중심의 조정능력
- ▷ 공공행정 관련 데이터와 지표 등

- 특히 회원국의 공공행정 동향 분석을 통해 각 정부의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

## □ 중점 분야 (Themes)

### (1)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혁

- 공공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의 필요성이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대
  - 성공적인 공공정책 형성을 위해 국민의 참여 확대 필요
  - 예산의 제약에 따른 서비스 효율성 강조
  -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
  - 인구변화 및 기술적·정치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 및 민첩성 등 요구
- 이에 따라, 공공서비스 전달에서도 표준화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설계함으로써, 서비스 제작 과정에 참여

### 【고려사항】

- ▷ 중앙 및 지방정부, 민간 및 국민 등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·법적 시사점
- ▷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효과, 투명성 향상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여부 및 이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확인
- ▷ 공무원의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 및 전문적 지식 보유 여부
- ▷ 서비스 제공의 평등성, 즉 동등한 서비스 접근성과 질에 대한 보장 여부 및 문화적 변화 가능성 등 고려

### (2) 거버넌스를 위한 개혁 설계 및 이행

- 공공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고, 개혁의 효과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인 공공정책 마련이 중요
  - 특히, 정책 기획 및 이행 시, 개혁의 촉진요인 및 방해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
-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개혁의 핵심요소로서,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부는 개혁의 기획 및 이행단계에서부터 국민, 기업,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

### 【고려사항】

- ▷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을 확인, 이들을 참여시키는 접근법 적용

- ▷ 공공부문 내에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
- ▷ 범정부 접근법(a-whole-government approach)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
- ▷ 장기 비용·편익 분석 및 개혁의 지속 가능성 보장 등 고려

### (3) 정부성과 평가

- 정부의 개혁성과 및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OECD에서는 “한눈에 보는 지표(Government at a Glance)”를 통하여 국가 간 정부 지표를 비교,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\* '09년 11월 책자로 발간 예정

- OECD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량적 데이터 뿐만 아니라, 효과적인 공공 행정을 위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부의 성과 측정을 지원, 향후 개혁방향 제시

## □ 세부 추진방안 (Public Governance Levers)

### (1) 예산 및 정부지출

*(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)*

- OECD 국가들의 재정규모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향후 축소될 전망
- 이에 따라, 정부는 우선추진사업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등 예산 및 공공지출시스템의 효과성을 증진

시키고 정부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

### 【향후과제】

- ▶ 공공-민간 파트너십(PPP)의 효과성 및 시장지향형 메커니즘
- ▶ 특별정부기금의 투명성 확보
  -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정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음
- ▶ 사업성과평가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및 예산의 투명성 확보
- ▶ 자연재해, 기타 재정위기 관련 예산 책정 및 정부지출구조의 경직성 완화 등

### (2)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

*(Public sector human resources management)*

- 적재적소 배치 등 보다 나은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구성 노력
- 인력개발은 국민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 직원을 배양하는 것에 주력

### 【향후과제】

- ▶ 인력의 적정 규모 및 구성, 기술 향상 등을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혁신적인 개발 연구 필요
- ▶ 재정 및 예산 관련 교육 및 능력배양, 효과적인 인력배치와 관리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견실한 공적 자금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노력

### (3) 전자정부 (*e-Government*)

-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높은 전자정부 준비지수를 보이는 반면, 서비스 이용의 활용도는 낮은 편임
-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구현 및 서비스 전달에 중점을 두고, 서비스 채널의 다양화 및 일관성(coherency) 등 적절한 정책 마련 필요
- 전자정부 개발 및 이행의 저해요인 등 분석
  - 고위급 관료, 정책형성자 및 공무원의 전자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한된 이해
  - 공공부문에서의 전자정부 이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 및 기술 부재
  - 역사적인 행정관행 및 문화적 장벽 존재 등

#### 【향후과제】

- ▶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설계 및 전달 (Designing and delivering user-centric public services)
- ▶ 전자정부 서비스 전달을 위한 능력 강화 (Reinforcing capacities for e-government service delivery) 등

### (4) 반부패 및 청렴 (*Promoting integrity and preventing corruption*)

-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-민간 및 정치-행정간 인터페이스 등 부패의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

인식과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

- 정부는 전통적인 관리와 책임의식으로는 현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청렴(integrity)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
- 정치자문가들의 특별 역할과 지위는 청렴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음
- 특히,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공분야에서 부패관련 리스크 존재

#### 【향후과제】

- ▶ 정부가 부패 관련 리스크를 확인, 청렴을 증진하고 공공-민간 및 정치-행정간 의사소통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수사례 개발 요구
- ▶ 특히, 민간에 위탁된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부패 리스크 확인 및 방지를 위한 정책과 메커니즘 연구

### (5) 국민 참여 (*Public Engagement*)

- 국민 참여는 공공 및 민간분야의 서비스 전달에서도 개혁과 가치창출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
- 국민(기업 및 시민단체 등 포함)은 더 이상 공공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며, 적극적인 협력자(collaborator)로서 공공서비스 기획 및 전달 과정에 공동참여 및 아이디어 공유

## 【향후과제】

- ▶ 공공서비스 기획 및 전달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의 보편화(mainstream) 추진
- ▶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국민중심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주력
- ▶ 열린 정부(open government)와 국민 참여 관련 우수사례 공유

## □ 시사점

- 향후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은 수동적인 참여에서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기반 한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
  - OECD 시민참여의 3단계(정보제공, 협의 및 적극적인 참여) 중 마지막 단계 진입
-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신뢰 확보가 우선 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며, 이는 예산, 인적자원관리, 전자정부, 반부패 정책, 정부성과측정 등 공공행정 일반에 반영됨
  - 특히, 전자정부 관련 각 정부는 전자 서비스 이용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전략을 개발
- '09년 발간 예정인 “한 눈에 보는 정부지표(Government at a Glance)” 를 통해 정부 간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우수사례 공유 등이 요구